

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특성과 대응 방향

목차

- I. 복지사각지대의 현황
- II. 경기도 취약계층 및
복지사각지대 특성
- III. 정책제언

복지사각지대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함

- ▶ 복지사각지대의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움
 - 구조적 한계, 신청주의, 낙인감, 선정 기준선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음
 - 또한 복지사각지대는 복지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

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특성은 지역별로 상이함

- ▶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총 1,722,853명으로 나타났음(2024년 4월 기준)
 - 시·군별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평균 약 29.6%로 나타났음(2024년 4월 기준)
- ▶ 경기도의 취약계층 비율은 북동부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분포는 위기 정보별로 상이하였음
 - 공과금, 사회보험료, 전기료, 임차료, 통신비 등을 체납한 복지대상자 및 전월세 금액 기준 이하인 복지대상자 비율은 경기 남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았음
- ▶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취약계층 규모와 함께 다양한 위기 정보들을 함께 톺아볼 필요가 있음
 - 경기도 시·군의 다양한 특성과 위기 정보를 조합하여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음

정책 제언

- ▶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‘경기도형 긴급복지’제도의 선정 기준, 지원 기간, 지원 횟수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
 - ‘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’와 찾아가는 ‘의료·돌봄 통합지원’도 필요함
- ▶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



복지사각지대는 다양한
형태로 존재하며
다양한 원인에 의해
발굴 및 지원이
어려움

복지사각지대의 개념

- ▶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정의하나에 따라 사각지대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
 - 첫째, 사회보장제도를 수급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이 불충분하여 여전히 빈곤을 겪는 복지대상자¹⁾
 - 둘째, 사회보장제도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나 여러 이유(제도 존재 모름, 신청의 까다로움, 사회적 낙인감 등)로 인해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²⁾
 - 셋째, 사회보장제도 수급 자격 기준(소득인정액 초과, 근로능력 등)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³⁾
 - 넷째,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 보다 높으나 가구 특성(노인, 장애인, 아동 등)에 따른 지출이 높은 차상위 계층 중 실질적 빈곤에 빠진 복지대상자⁴⁾
- ▶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,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함.
 - 복지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발굴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가 사회보장제도 수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기 않기 때문임⁵⁾
- ▶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움
 - 복지급여 수준이 불충분한 복지대상자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우며, 복지급여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함
 -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나 비수급 복지대상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해소가 어려우며, 낙인감 해소, 정보 접근성, 행정 편의성 증진 등이 필요함
 -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의해 수급권에서 배제되는 복지대상자와 실질적으로 빈곤한 복지대상자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개정과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필요함

1) 이승호·구인회(2010). "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 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", 보건사회연구, 30(1): 29-61.

2) 박능후·송미영(2008). "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격 적격성 연구: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", 사회복지연구, 39(1):287-314.

노대명·김경휘·원일·박은영·이종아(2009). 「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요인 실태조사」, 보건복지부.

3) 김미곤(2003). 「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」,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여유진(2004). "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 사각지대: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", 보건사회연구, 24(1): 4-28.

이승호·구인회(2010). "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 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", 보건사회연구, 30(1): 29-61.

4) 노대명·김경휘·원일·박은영·이종아(2009). 「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요인 실태조사」, 보건복지부.

석재은(2011). "맞춤형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빈곤정책의 제도개선 방향", 보건복지포럼, 177(1): 10-18.

5) 강신욱·이현주·손병돈·금현섭·김성한·김용득·민소영·정하선·이경진(2011). 「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」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I. 복지사각지대의 현황

복지사각지대를
해소하기 위한
지속적인 노력에도
불구하고
복지사각지대는
증가하고 있음

- ▶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음
 -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, 2022년 창신동 사건,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비극적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지속되고 있음
 - 이에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
- ▶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45종의 위기 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는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임
 -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유형 중 수급 자격이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, 차상위자, 실질적 빈곤에 빠진 복지대상자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되었음
 -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다양한 위기 정보는 지역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가능성이 높음

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

- ▶ 전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2020년 1,021,740명에서 2021년 1,259,573명으로 약 1.23배 증가하였음⁶⁾
 - 2020년 격월 평균 170,290명에서 2021년 209,929명으로 증가하고 있음
 - 2020년과 2021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1.3배 많았으며, 만 45세에서 64세 미만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〈그림 1〉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추이



자료: 최정은 외(2022).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

6) 최정은·김윤영·최기정·이인수(2022). 「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」, 한국사회보장정보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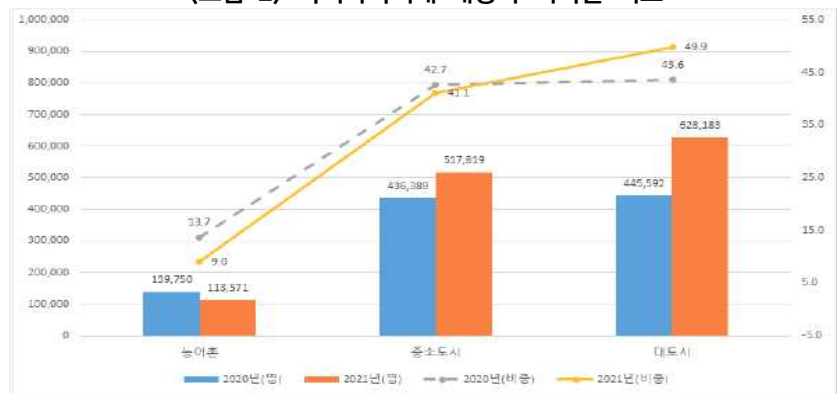
I. 복지사각지대의 현황

복지사각지대는 주로
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
분포하고 있으며
연령에 따라 분포가
상이함

▶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순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⁷⁾

- 2020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대도시 43.6%, 중소도시 42.7%, 농어촌 13.7%로 나타났으며, 2021년에는 대도시 49.9%, 중소도시 41.1%, 농어촌 9.0%로 나타났다
- 지역 규모별 평균 대상자는 13.6%p 증가하였고, 대도시는 약 41.0%p, 중소도시 18.7%p 증가하였고, 농어촌은 18.7%p 감소하였음

〈그림 2〉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역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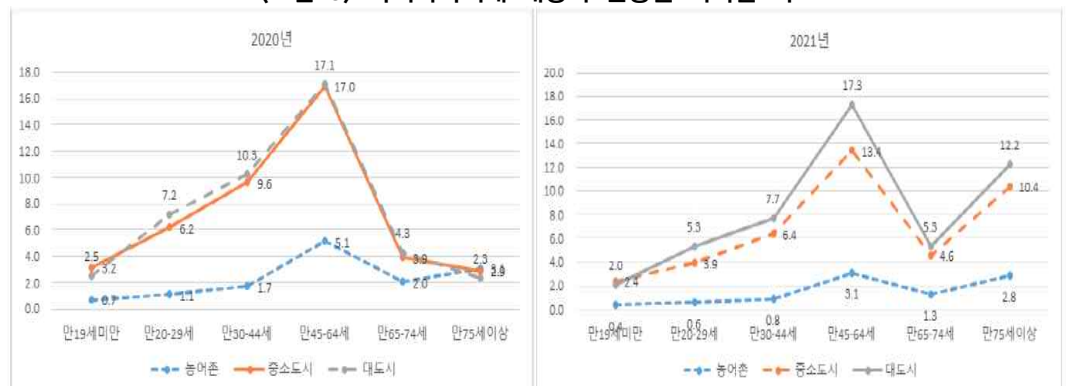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최정은 외(2022).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

▶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중 청년층(20-30대)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많이 분포하고,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농어촌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⁸⁾

- 2020년 청년층(만30-44세) 및 중장년층(만45-64세)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도시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었음
- 2021년도 마찬가지로 청년층(만30-44세) 및 중장년층(만45-64세)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분포의 격차가 발생하였음

〈그림 3〉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연령별 지역별 비교



자료: 최정은 외(2022).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

7) 최정은·김윤영·최기정·이인수(2022). 「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」, 한국사회보장정보원.

8) 최정은·김윤영·최기정·이인수(2022). 「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」, 한국사회보장정보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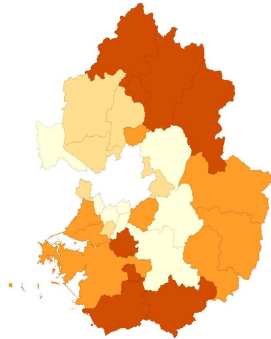
II. 경기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특성

취약계층 비율은
경기 북동부 지역을
중심으로 높게
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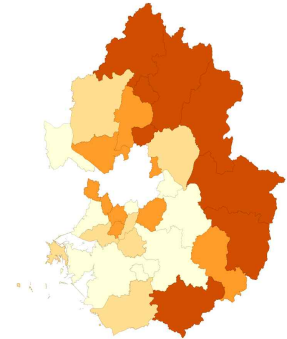
경기도 취약계층 현황

- ▶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서 1인 가구 비율과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, 두 취약계층 현황은 유사하게 나타났음
 - 경기도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평균 약 30.5%로 나타났고,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은 평균 약 7.9%로 나타났음(2022년 기준)
 - 1인 가구 비율은 포천시(39.5%), 가평군(37.6%), 연천군(37.0%), 안성시(36.1%), 평택시(36.0%) 순으로 높았음
 -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은 연천군(16.1%), 가평군(15.0%), 양평군(13.5%), 동두천시(13.1%), 여주시(11.0%) 순으로 높았음
 - 연천군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기에 1인가구의 비율도 높았고,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
〈그림 4〉 경기도 1인 가구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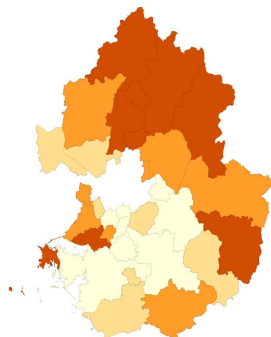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5〉 경기도 독거노인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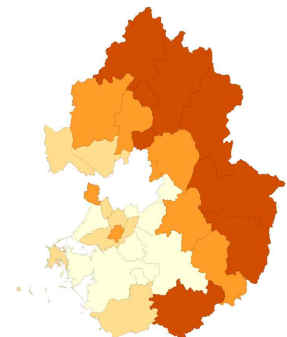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포털(KOSIS)

- ▶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과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, 두 취약계층 현황은 유사하게 나타났음
 -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평균 약 4.1%로 나타났고,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약 11.3%로 나타났음(2024년 4월 기준)

〈그림 6〉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



〈그림 7〉 경기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



자료: 국가통계포털(KOSIS)

9)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 수로 산정하고 있지만, 본 연구는 경기도 시·군의 비교를 위해 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로 산정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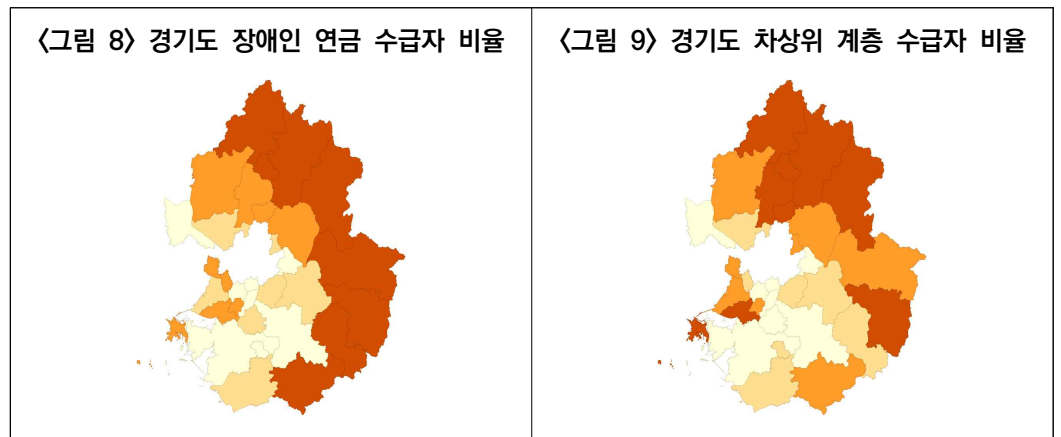
II. 경기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특성

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도 경기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음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동두천시(9.53%), 가평군(7.1%), 연천군(7.0%), 포천시(6.5%), 의정부시(5.8%) 순으로 높았음
-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연천군(22.1%), 가평군(19.5%), 동두천시(19.1%), 여주시(17.0%), 포천시(16.8%) 순으로 높았음
- 동두천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,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등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- 가평군의 경우 1인 가구 비율, 독거노인 비율,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,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,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- 연천군의 경우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,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
▶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은 다른 취약계층 비율 분포와 유사하였으나, 차상위 계층 수급자 비율은 경기도 남서부 지역도 일부 높게 나타났음

-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은 약 0.6%¹⁰⁾로 나타났고(2024년 4월 기준), 차상위 계층 비율은 1.6%로 나타났음(2022년 기준)
 -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은 가평군(1.6%), 연천군(1.2%), 동두천시(1.1%), 포천시(1.0%), 양평군(1.0%) 순으로 높았음
 - 차상위 계층 비율은 동두천시(4.4%), 연천군(2.9%), 포천시(2.6%), 의정부시(2.4%), 안산시(2.3%) 순으로 높았음



자료: 국가통계포털(KOSIS)

▶ 경기도 취약계층 비율 분포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분포는 서로 다를 수 있음

- 취약계층의 분포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분포와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겠으나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고 있기에 다양한 유형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음
- 사회보장제도를 수급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

10)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율로 산정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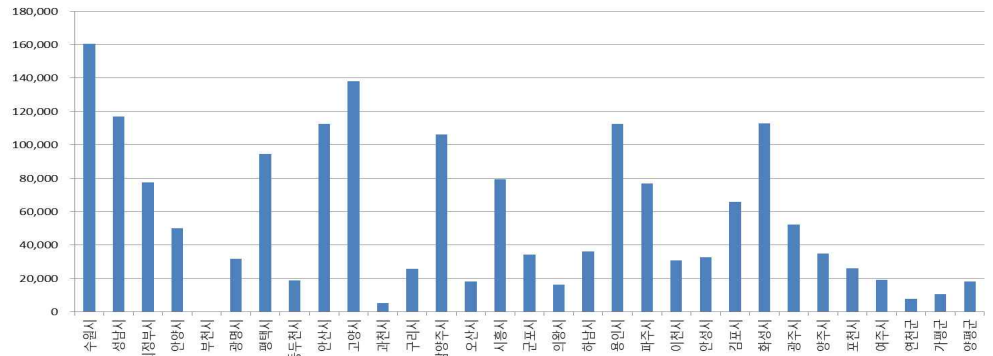
II. 경기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특성

경기도 시·군별
복지사각지대 대상자
비율은 평균 약
29.6%로 나타났다

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현황

- ▶ 2024년 4월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 전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총 1,722,853명으로 나타났다¹¹⁾
 -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수는 수원시(160,537명), 고양시(138,196명), 화성시(112,953명), 용인시(112,690명)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
 - 그리고 과천시(5,190명), 연천군(7,699명), 가평군(10,615명), 의왕시(16,207명), 오산시(18,129명)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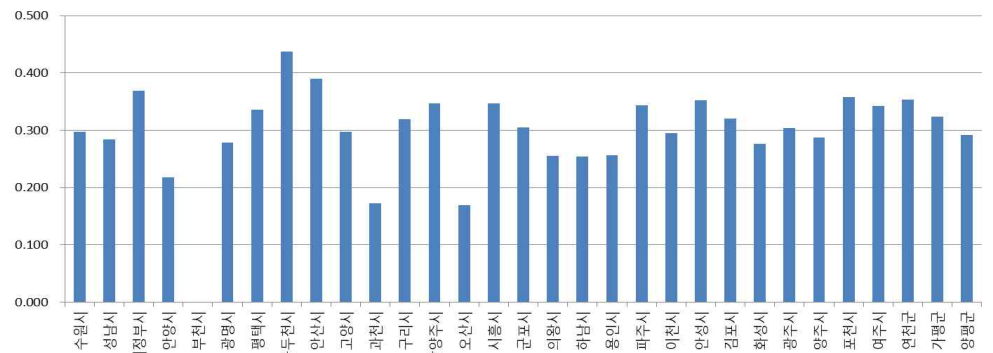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〉 경기도 시·군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수



자료: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(2024년 4월 5일 기준)

- ▶ 시·군별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평균 약 29.6%로 나타났다
- 범위는 최소 17.2%(과천시)에서 최대 43.7%(동두천시) 사이로 나타났다
-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비율은 동두천시(43.7%), 안산시(39.0%), 의정부시(36.9%), 포천시(35.8%), 연천군(35.3%)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
- 그리고 오산시(16.9%), 과천시(17.2%), 안양시(21.8%), 하남시(25.5%), 의왕시(25.5%)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

〈그림 11〉 경기도 시·군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비율



자료: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(2024년 4월 5일 기준)

11) 부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 작업으로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였음

II. 경기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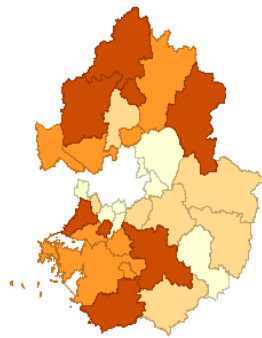
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특성과 대응 방향

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비율은 위기정보별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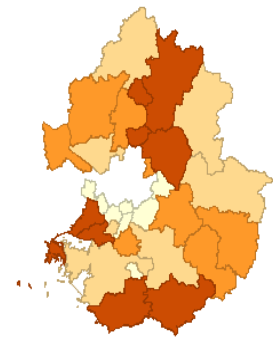
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위기 정보별 특성

- ▶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평균 134명(중복 허용)으로 나타났고,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한 대상자¹²⁾는 평균 20,303명(중복 허용)으로 나타났음
 -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단전·단수도·단가스 대상자 비율은 연천군(0.27%), 군포시(0.21%), 동두천시(0.19%), 가평군(0.13%), 평택시(0.11%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
 - 체납 대상자 비율은 동두천시(19.6%), 안산시(16.6%), 시흥시(15.0%), 안성시(14.5%), 평택시(14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

〈그림 12〉 경기도 단전·단수도·단가스 대상자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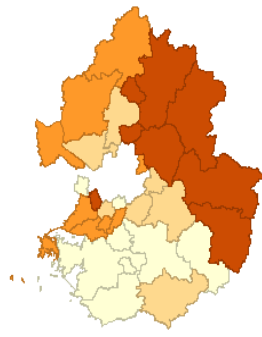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3〉 경기도 체납 대상자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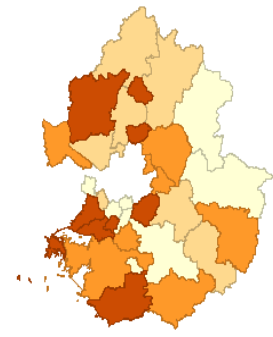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(2024년 4월 5일 기준)

- ▶ 의료비 과다 지출 대상자는 각 시·군별 평균 336명으로 나타났고, 전월세 취약대상자¹³⁾는 평균 19,069명(중복 허용)으로 나타났음
 - 의료비 과다 지출 대상자 비율은 동두천시(0.27%), 포천시(0.27%), 가평군(0.26%), 광명시(0.25%), 남양주시(0.24%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
 - 전월세 취약 대상자 비율은 안산시(14.5%), 동두천시(14.4%), 의정부시(12.8%), 군포시(12.3%), 파주시(12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

〈그림 14〉 경기도 의료비 과다 지출 대상자 비율



〈그림 15〉 경기도 전월세 취약 대상자 비율



자료: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(2024년 4월 5일 기준)

12) 전기로 체납, 건강보험료 체납, 국민연금 체납, 관리비 체납, 임차료 체납, 통신비 체납, 금융 연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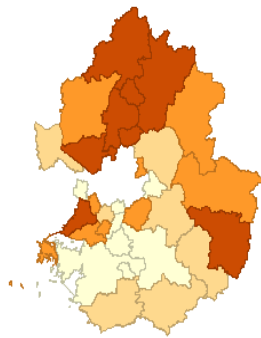
13)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적용(대도시 1억원, 중소도시 6,800만원, 농어촌 3,800만원)

II. 경기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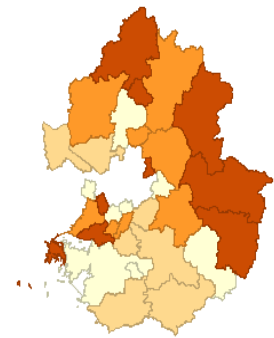
경기도 취약계층
분포와 복지사각지대
위기 정보별 분포는
서로 상이하였음

- ▶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신청 탈락자는 평균 1,757명(중복 허용)으로 나타났고, 실업 등¹⁴⁾ 취약 대상자는 평균 10,488명(중복 허용)으로 나타났음
 - 기초 및 긴급 신청 탈락자 비율은 의정부시(2.8%), 포천시(1.8%), 연천군(1.8%), 동두천시(1.7%), 시흥시(1.5%) 순으로 높았음
 - 실업 등 취약 대상자 비율은 연천군(8.5%), 가평군(7.5%), 안산시(7.0%), 동두천시(7.0%), 구리시(6.9%) 순으로 높았음

〈그림 16〉 경기도 기초·긴급 신청 탈락자 비율



〈그림 17〉 경기도 실업 등 취약 대상자 비율



자료: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(2024년 4월 5일 기준)

- ▶ 경기도의 취약계층 비율은 대체적으로 북동부 시·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분포 형태는 위기 정보별로 다름
 - 1인 가구 비율, 독거노인 비율,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 등 취약계층의 비율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위기 정보 보유 비율은 각 위기 정보별로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음
 - 단전·단수도·단가스 위기 정보를 가진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포시, 용인시, 평택시, 화성시, 수원시, 안산시와 같은 남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았음
 - 체납 위기 정보 비율은 안성시, 평택시, 안산시, 수원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
 - 전월세 취약 위기 정보 비율은 용인시, 군포시, 평택시, 안성시, 화성시, 수원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
 - 실업 위기 정보 비율은 안산시, 군포시, 의왕시, 광주시, 여주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
 - 취약계층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존 사회보장 지표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위기정보를 함께 톺아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 - 경기도의 시·군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정보를 조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
 - 경기도 시·군의 위기 정보 비율을 토대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음

14) 휴·폐업, 실업급여 수급, 실업급여 미수급, 산재요양 후 미취업, 미취업 일용근로자, 구직급여 연장

경기도의 특성을
고려하여
복지사각지대를
해소하기 위한 정책
수립이 필요함

경기도의 시·군별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 필요

- ▶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여 주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
 - 경기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경기도 시·군의 위기 계층별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함
- ▶ 기초·긴급 신청 탈락자 비율이 높고 공공부조 수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‘경기도형 긴급복지’ 제도의 선정 기준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
 - 그러나 ‘경기도형 긴급복지’의 경우 최대 지원 기간과 횟수가 제한적이기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다소 한계가 존재함
 -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‘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’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
- ▶ 의료비 과다 지출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‘경기도형 긴급복지’ 제도에서 ‘의료지원’과 ‘긴급통합지원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그러나 ‘긴급통합지원’의 경우 1회 400만원 이내로 지원금액과 횟수가 제한적이기에 의료비 지출이 높은 복지대상자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기에 ‘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’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▶ 그리고 의료비 과다 지출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의료비 지원 정책과 더불어 찾아가는 ‘의료·돌봄 통합지원’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
 - 이 지역은 주로 농어촌 지역으로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거의 일치하기에 직접 찾아가는 ‘의료·돌봄 통합지원’이 필요함
 -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,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⁵⁾

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도 중요함

- ▶ 복지사각지대 위기 정보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
 -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, 이·통장, 시민단체 회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음¹⁶⁾

15) 박규범·윤기찬(2019). “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요인 검토”, 이슈리포트, 사회보장정보원.

16) 이영글·박성준·함영진(2021). “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”, 사회복지정책, 48(1): 97-121.